

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

25-15-3

(서면, 공개)

수요자 중심 · AI 기반

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

- 중소기업 지원사업 쉽게 이용하기 -

2025. 11. 4.

관 계 부 처 합 동

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 [요약]

1 현장의 목소리

- 중소기업·창업·소상공인 등 지원 분야별 37개 사업신청 채널이 산재되어 있고 정보제공 플랫폼도 이원화(기업마당·중소벤처24)*
 - * (기업마당, '06~) 정부·지자체 지원사업 공고, BI 입주기업 모집 등 (중소벤처24, '20~) 중기부 사업공고, 인증·확인서 발급, 주택특별공급 공고 등
- 관행적 제출서류, 기업정보 연계 미진 등으로 지원사업 신청서류가 많아 생업에 바쁜 기업의 부담 가중 → 불법 브로커 양산
 - * 지원사업당 평균 11.3개의 신청서류 중 9개는 기업이 직접 제출
- 길고 복잡한 선정 절차와 외부 평가위원의 전문성·객관성 부족 우려로 인해 지원사업 신뢰 저하

2 세부 추진과제

1 「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」(가칭 '기업마당') 구축

- (통합 플랫폼*) 지원사업 정보 제공 양대 플랫폼인 기업마당과 중소기업24의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('26.말)
 - * 정부·지자체 등 2,700여개 중소기업·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사업공고를 통합 제공, 중소·여성·벤처기업 확인서 등 21종의 확인·인증서를 통합 발급
- (통합 관문) 통합 플랫폼 로그인만으로 타 부처의 지원사업 신청 채널과 연결되어 지원사업 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('27~)

2 AI 기반 맞춤형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

- 기업·정책정보 등을 학습한 AI를 통해 대화형 자연어 검색 기반의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, 기업별 맞춤형 지원사업 추천('26.下~)
- 창업, 수출, 소상공인 등 지원분야별 특화 정보 제공
 - * (창업) 지원 신청 희망 스타트업과 사업간 적합도를 「맞춤지수」로 제시('26.下~,창진원) (수출) 품목·국가별 관세, 수입수요 등 정보와 맞춤형 수출국가 추천('25.12~중진공) (소상공인) 상권분석 등 맞춤형 상담·분석을 제공하는 「AI 도우미」 구현('26.下~소진공)

③ 디지털화로 서류부담 감축

-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50% 이상 감축('26~, 평균 9개 → 4.4개)
 - 공공마이데이터·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의 기업정보를 연계하여 재무제표, 사업자등록증 등 행정기관 발급서류를 자동제출
 - 동의서 등 간단한 서류는 신청서에 통합 또는 온라인 체크로 바꾸고, 선정 단계별 꼭 필요한 서류만 받는 등 직접 작성 최소화
- 키워드 입력만으로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해주는 생성형 AI를 무료 제공하여 생업에 바쁜 영세기업의 부담 완화
 - * ('25.8) 스마트공장 사업 시범 모델 개발 → ('26~) 중진공, 기정원 등 특화 모델 구축

④ 불법 브로커 등 제3자 부당개입 차단

- 여러 기업에 중복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주는 브로커의 특성을 역이용하여 AI 기반 사업계획서 중복성 탐지 시스템 구축
 - * (중진공·소진공·창진원 등) 논문표절시스템(카피킬러)을 벤치마킹하여 AI를 기반으로 문맥·의미·이미지 등을 고려한 중복성 판단 기능 구축('26.上)
- 제3자 부당개입 행위 중 기관 사칭, 허위서류 제출 등 불법 행위를 유형화하고 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, 제재규정 마련('26.上)

⑤ 시장·AI 기반 혁신기업 선별 강화

- 투자시장·대기업 등 시장의 선별 능력을 활용한 지원기업 선정 확대
 - * 시장기능 활용 지원사업 예산(억원) : ('25) 8,759 → ('26.안) 13,400(+53.0%)
- AI·빅데이터 기반 혁신 기술기업 평가 모델(K-TOP) 확산
 - 오픈 플랫폼 구축 및 평가 모델 무료 개방으로 기업이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사업 선정 가능성을 확인('26.下~)
 - 지원기업 선정 심사에 점진적으로 반영하고, 지원성과 피드백
 - * ('26년 적용) R&D 성과조사,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, 레전드 50+ 등 10개 사업
- AI 기반 중소기업·소상공인 심사 고도화
 - * (중소기업) AI 평가모델(K-value)을 중진공 정책자금에서 재정사업으로 확산('26~)
 - (소상공인) AI 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시스템 개발 추진('25.下~, 금융위 협업)

목 차

I. 현장의 목소리	1
II. 개선방향	3
III. 추진과제	4
1. 「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」 구축	4
2. AI 기반 맞춤형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	5
3. 디지털화로 서류 부담 감축	6
4. 불법 브로커 등 제3자 부당개입 차단	8
5. 시장·AI 기반 혁신기업 선별 강화	9
IV. 향후계획	12
【 참고 】 K-TOP 개요 및 '26년 평가 적용 사업	13

I. 현장의 목소리

1. 산재된 지원사업 정보 · 신청 채널

- 정책금융/R&D/창업/소상공인 등 공공기관별 지원분야에 한정된 37개 사업관리 플랫폼이 산재
- 정보제공 플랫폼인 기업마당·중소벤처24의 제공정보 및 서비스 범위가 상이하여 모두 접속해야하는 불편
 - * (기업마당, '06~) 정부·지자체 지원사업 공고, BI 입주기업 모집 등 (중소벤처24, '20~) 중기부 사업공고, 인증·확인서 발급, 중소기업 주력특별공급 공고 등

2. 많은 제출서류로 지원 신청 준비 부담

- 관행적 제출서류, 지원기관의 DX 역량 부족, 기업정보 연계 미진 등으로 인해 생업에 바쁜 기업의 서류준비 부담 가중
 - * 지원사업당 평균 11.3개의 신청서류 중 9개는 기업이 직접 제출
- 신청서류 부담, 절차 복잡성으로 인해 불법 브로커가 양산되며 높은 수수료와 보험가입 강요, 공공기관 사칭 등이 이슈화
 - * (대전 CBS, '25.3.9) "금리 2~3% 소상공인 정책자금, 브로커 수수료는 10%"
 - ** (브로커 적발현황) 대가로 보험가입 강요(19), 정부기관 사칭(4) 등 31건(중진공, '19~'24)

3. 길고 복잡한 평가 과정

- 공정성 확보를 위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단계별 심사 방식으로 인해 다양한 기술트렌드와 사업모델 등을 평가하는데 한계
- 사업공고 이후 신청·접수, 서류 심사, 평가위원회 개최 등 길고 복잡한 선정절차 운영으로 실제 사업 수행기간은 약 6개월에 불과
 - * 지원사업 운영 일정(예) : 공고(1~2월) → 접수(2~3월) → 평가(3~4월) → 선정(5~6월)
- 지원기관의 기업 DB 구축·활용 역량이 부족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이 어렵고, 선정기업의 지원성과에 대한 정책 환류 체계 부족

< 주요 애로 의견 >

* 중기부 장관, 현장 간담회(45회) + 온라인 소통창구('현장의 목소리') 운영을 통해 지원사업 관련 기업 애로사항 청취

☑ 지원사업 정보 탐색 어려움

- “지원사업 정보가 흩어져 있어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. 지난 번에는 정보를 찾다가 지쳐 신청 시기를 놓쳤습니다.” 수출 중소기업 A사
- “중소벤처24에 들어가보니 지원사업이 너무 많아서 놀랐습니다. 어떤걸 신청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.” 유통 중소기업 B사

☑ 신청서류 부담

- “관행적인 신청서류가 너무 많고, 기본적인 기업정보 자료에 대한 부처간 연계, 전자화·정보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.” 제조기술기업 C사
- “중소기업 확인서는 중기부가 발급하는건데 중기부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기업이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.” 반도체 스타트업 D사

☑ 제3자 부당개입 피해

- “정부의 정책자금 광고를 보고 신청을 했는데 알고보니 정부를 사칭하는 브로커였습니다. 보험계약까지 끼워팔더군요” 음식점 소상공인 E사
- “컨설팅 업체가 선금금을 받고 지원사업에서 탈락하자 연락이 두절되는 등 부정사례를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.” 시스템SW 개발 F사

☑ 객관적·효율적 심사 미흡

- “평가위원이 우리가 개발한 기술의 관련 지식을 잘 모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. 결국 지원사업에서 탈락했는데, 혁신 기술을 인정받아 CES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.” 나노필름제조 스타트업 G사
- “공고를 빨리하더라도 현장평가·평가위원회를 하다보면 실질적인 사업 수행기간은 5-6개월에 불과합니다.” 캡슐호텔 스타트업 H사

II. 개선방향

- ◇ 수요자 편의를 위한 정보제공·사업신청 One-Gate 채널 구축
- ◇ 공공기관 DX를 통한 신청부담 경감, 똑똑한 지원
- ◇ 시장·AI를 활용한 혁신기업 선별 체계 강화

단계	기업애로	개선
정보 탐색	이원화된 정보제공 플랫폼	① 「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」 [가칭 '기업마당'] 구축 ② AI 기반 맞춤형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
↓	→	
신청 창구	지원분야별 신청 채널 37개	
↓	→	
서류 제출	기업정보 연계 부족 관행적 서류제출 부담 * 제출서류 9개	③ 디지털화로 서류부담 감축(△51%)
↓	→	
브 로 커	불법 브로커 양산 ▪ 높은 수수료, 보험가입 강요 ▪ 공공기관 사칭	④ 제3자 부당개입 차단 ▪ AI 기반 브로커 적발 체계 구축 ▪ 제재·처벌 법적근거 마련
↓	→	
심사	외부 전문가 중심 평가 길고·복잡한 선정과정	⑤ 시장·AI 기반 혁신기업 선별 강화

Ⅲ. 추진과제

1

「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」(가칭 '기업마당') 구축

- **(통합 플랫폼)** 지원사업 정보 제공 양대 플랫폼인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의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('26.말)
 - 정부부처·지자체·공공기관 등의 2,700여개 중소기업·스타트업·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 및 정책 정보 통합 제공
 - * 외국인력 활용 지원사업, 인바운드 창업 등 외국인 관련정책은 영어 등 다국가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여 **외국인 친화적 정책정보** 전달체계 조성
 - 중소·여성·벤처기업 확인서 등 21종의 확인·인증서를 통합 발급
 - **(통합 관문)** 통합 플랫폼 로그인만으로 타 부처의 지원사업 신청 채널과 연결되어 지원사업 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('27)
 - * (1단계, ~'26.3Q) 중기부 신청채널 연결 → (2단계) 부처협의를 거쳐 중기부 통합 지원 플랫폼의 연계 채널을 타 부처 중소기업 지원 공공기관으로 확대 추진
 - **(AI 서비스)** AI 기반 지원사업 추천 등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('27)
 - **(안정성 강화)**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통합플랫폼 실시간 소산 백업 체계 구축('26.下) 및 사업신청 채널 데이터 백업 조치('25.말)
- ⇒ 정책 수요자가 지원사업 주관 부처와 상관없이 가장 먼저 믿고 접속할 수 있는 '첫번째 연결창구'로 정립

<중소기업 지원 통합 플랫폼 구축 개요>



□ AI 기반 지원사업 매칭 지원

* (26.下) 중진공, 소진공 등 특화 모델을 순차적으로 개발하여 개별 플랫폼에서 운영
(27) 「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」을 통해 쏘 중소기업 지원사업 대상 추천·컨설팅 운영

- 업종·지역·업력 등 기업정보, 수혜이력, 사용자 검색기록 등을 학습한 AI를 기반으로 기업별 맞춤형 지원사업 제시
- 대화형 자연어 검색을 통해 수요자가 쉽게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정책·법령·민원 등을 학습한 AI를 기반으로 민원상담 서비스 제공

□ AI 기반 지원분야별 특화 정보 제공

- (창업) 지원사업의 신청 희망 스타트업과 既 선정기업군을 비교·분석하여 적합 여부를 제공하는 '닭음지수' 서비스 개시(26.下, 창진원)
- (수출) 중소기업별 (희망)수출품목에 대해 국가별 관세, 수입수요 등 정보와 함께 맞춤형 수출국가 추천(25.말, 중진공 비즈패스파인더)
 - 품목별 관세 변화에 따른 수출 영향도를 분석하여 제공하고, 대체 시장 후보국 제시 등 수출국가 다변화 전략 수립 지원(26)
- (소상공인) 상권분석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 정책 전반에 대해 맞춤형 상담·분석·제안을 제공하는 「AI 도우미」 단계별 구현(26.下)
- (제조AI) 스마트제조·서비스 플랫폼*을 「제조AI 24」로 단계적 통합하고, 제조기업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최적의 기술기업 추천(30)

* 스마트공장·스마트서비스 사업관리시스템, 인공지능 중소제조플랫폼(제조데이터)

□ 스타트업을 통한 AI 공공서비스 개발

- AI 스타트업 대상 「OpenData X AI 챌린지*」 개최(25.11~26.2) 등을 통해 현장 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반 지원사업 서비스 개발 추진

* (지원과제) ① AI 기반 中企 성장·위험 예측 서비스, ② 지원시책·상권분석 등 소상공인 맞춤형 AI 컨설팅 서비스, ③ AI 기반 맞춤형 지원사업 추천 서비스
- 사업공고 등 정책 정보를 표준화된 형식으로 제공하는 등 AI 친화적 문서 환경을 조성하여 AI 스타트업의 공공데이터 활용 촉진(26.上)

3

디지털화로 서류부담 감축

□ 기업 직접 제출서류 50% 이상 감축(평균 9개 → 4.4개, '26.上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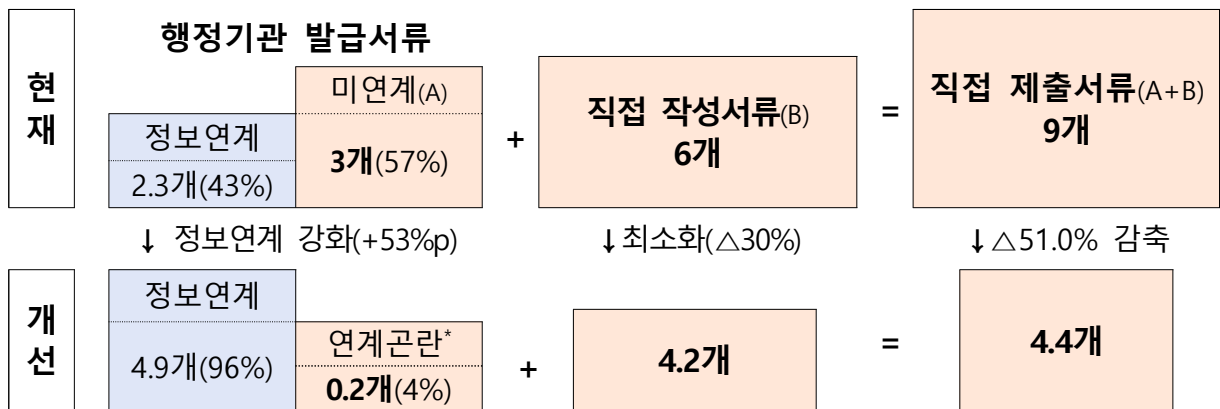
○ (행정기관 발급서류) 행정정보공동이용·공공마이데이터·중소벤처24 등의 기업정보를 연계하여 행정기관 발급서류* 대부분(96%)을 자동제출

* (국세청) 사업자등록증, 재무제표, 납세증명서, (중기부) 중소·여성·벤처기업 확인서 등

○ (직접 작성서류) 간단한 서류*는 신청서에 통합 또는 온라인 체크로 바꾸고, 선정 단계별 꼭 필요한 서류만 받는 등 직접 작성 최소화

* 개인정보 이용·제공동의서, 협약서, 상품 기술서, 각종 체크리스트 등

< 신청서류 간소화 개념도 >



* (연계곤란) 신청기업 50개사 미만 사업, 법인등기부등본 등 법원 보유 정보 등

< 신청서류 감축 예시 >

	현재 9개	→	개선 2개
행정기관 발급서류	사업자등록증(국세청) 재무제표(국세청) 중소기업 확인서(중기부)		자동 제출
직접 작성서류	개인정보 이용·제공 동의서 협약서 청렴 서약서 사업계획서 (10~20p) 사업신청서		온라인 체크로 대체 최종 선정시 제출 사업 신청서에 통합 AI 작성 지원 시스템 활용 현행 유지

<지원사업 신청서류 감축 우수사례>

- (지역신용보증) 대상확인·가점부여 등을 위해 필요한 행정기관 발급서류 중 57종을 기업정보연계로 자동제출 되도록 추진하여 직접 제출서류 최소화
- (R&D) 모든 신청기업이 제출하던 3책5공 기준 준수확인서, 조기완납기업 확인서 등 5종 이상 서류를 최종 선정기업에만 요구

○ 부처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서류 감축 추진

- * (행안부) 개인사업자로 국한된 기업정보 연계 대상을 법인사업자까지 확대('26)
(과기부) R&D 플랫폼(IRIS)과 국세청 연계로 사업자등록증, 재무제표를 자동 제출('26)
(순 부처 확산) 중기부 방식 벤치마킹으로 신청서류 감축 추진('2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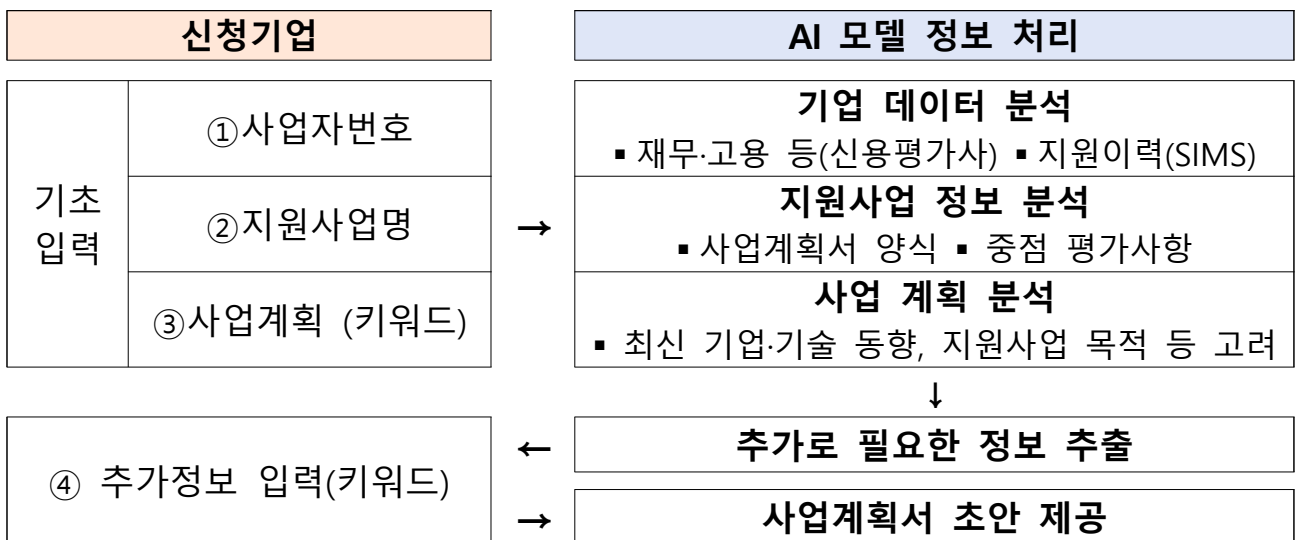
□ AI 기반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시스템 구축

- * ('25.8) 스마트공장 사업 시범 모델 개발 → ('26.下) 중진공, 기정원 등 특화 모델 구축

○ 키워드 입력만으로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해주는 생성형 AI를 무료 제공하여 생업에 바쁜 영세기업의 부담 완화

- 기업데이터(업종·업력·지역 등), 지원사업 정보(양식·평가지표·우수계획서) 등을 학습하여 신청기업·지원사업별 맞춤형 초안을 제공
- AI가 분석한 정보 외 추가로 필요한 정보를 기업에 재요청하여 높은 품질의 사업계획서 초안을 제공

<AI 기반 사업계획서 작성지원 프로세스(예시)>



4

불법 브로커 등 제3자 부당개입 차단

□ '제3자 부당개입 예방·신고·적발 체계' 가동

- 지방중기청(13개), 공공기관(7개)별 제3자 부당개입 신고 채널을 운영하여 피해기업에 구제 방법 안내* 및 불법 광고물 제거('26.上)
- * 계약불이행(민법), 보험계약 끼워팔기(보험업법) 등 현행법 위반은 경찰 신고 안내

□ AI·데이터 기반 불법 브로커 적발 시스템 구축·운영

- 여러 기업에 중복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주는 브로커의 특성을 역이용하여 AI 기반 사업계획서 중복성 탐지 시스템 구축
 - * (중진공·소진공·창진원 등) 논문표절시스템(카피킬러)을 벤치마킹하여 AI를 기반으로 문맥·의미·이미지 등을 고려한 중복성 판단 기능 구축 및 고도화
- 브로커가 동일 장소에서 단시간에 다수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다수 사업을 신청하는 행위를 IP 탐지로 적발하여 대리신청 차단
 - * 소진공에서 既 운영중인 시스템을 중진공·기보·기정원·창진원 등으로 확산('26.上)

□ 정책자금 컨설팅 양성화 및 불법행위 제재 법적근거 마련

- 정책자금 컨설팅 양성화를 위해 업무범위, 정책자금 컨설턴트 기준·요건 및 관리체계 마련*을 위한 법제화 추진 ('26.上)
 - * 타 전문자격사 규정 및 운영사례 등을 참고하여 제도적 양성화 방안 검토
- 제3자 부당개입 행위 중 기관 사칭, 허위서류 제출 등 불법 행위를 유형화*하고 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, 제재규정 마련
 - * 정부 또는 공공기관 명의·CI 사용 등을 통한 사칭행위, 허위 서류 작성·제출 중용, 정책자금 컨설팅을 미끼로 한 보험상품 영업 등

<제3자 부당개입 제재 법률 개정 검토안>

구분	개정 검토(안)	
컨설턴트 양성화	정책자금 컨설팅 관련 컨설턴트 업무범위, 기준·요건, 관리체계 등	
불법 행위	유형	정부·공공기관 사칭, 허위 서류 작성·제출, 보험계약 끼워팔기 등 불법·악의적 제3자 부당개입 행위 유형화
	확인·신고	공공기관에 제3자 부당개입 의심업체 대상 자료제출 요구권 부여 경찰 등 관련기관에 수사의뢰 요청권 등 부여
	제재·처벌	타법 제재조치 수준을 고려한 벌칙, 제3자 부당개입 업체 명단공개

5

시장·AI 기반 혁신기업 선별 강화

- ◇ VC, 대기업 등 시장의 선별능력을 활용하여 평가위원 한계 극복
 - 시장기능 활용 기업선정(개사) : ('25) 1,825 → ('26.안) 2,482(+36.0%)
 - 시장기능 활용 지원예산(억원) : ('25) 8,759 → ('26.안) 13,400(+53.0%)
 - * 창업·R&D 예산 대비 비중(%) : ('25) 38.2 → ('26.안) 44.0(+5.8%p)

□ 투자시장을 활용한 지원기업 선별 확대

- (TIPS) 벤처캐피탈(VC)이 先투자·추천한 스타트업을 투자규모·성장 단계별 차등 지원하는 TIPS 프로그램 확대
 - * 관련 예산/지원기업(억원/개사) ('25) 7,478/876 → ('26.안) 11,592(+55%)/1,200(+37%)

성장단계		창업 팁스 (투자유치 2억원 내외)	스케일업 팁스 (투자유치 10억원 이상)	글로벌 팁스 (투자유치 국내 15억원 + 해외 100만불 이상)
지원 내용	R&D 비R&D	8억원 사업화 최대 3억	20(일반)~30억원(정책) 지분투자 1:1, 최대 30억원	50(일반)~60억원(정책) 지분투자 1:1, 최대 40억원

- (투자연계) 혁신성·성장성을 이미 검증받은 투자유치 실적보유 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확대
 - * 관련 예산/지원기업(억원/개사) : ('25) 249/80 → ('26.안) 430(+72%)/150(+88%)
 - 시리즈 B(아기유니콘) 단계 기업의 유니콘화를 패스트트랙으로 추진 하는 '유니콘 브릿지 프로그램' 신설('26.안 320억원/50개사)
 - 창업패키지 지원사업에 투자유치 실적보유 기업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'투자연계형' 트랙 신설('26.안 110억원/100개사)

□ 대기업 수요기반 혁신 스타트업 매칭

- (수요 대기업) 현대자동차, LG 등 대기업이 수요에 맞는 파트너 스타트업을 직접 선별하는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 확대
 - * (딥테크 밸류업, 억원/개사) ('25) 70/50 → ('26.안) 84(+20%)/60(+20%)
(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, 억원/개사) ('25) 130/120 → ('26.안) 158(+22%)/140(+17%)
- (글로벌 기업) 구글, 엔비디아 등이 보유한 인프라·서비스를 활용하여 유망 스타트업을 직접 지원하는 'Around X' 확대
 - * 관련 예산/지원기업(억원/개사) : ('25) 530/360 → ('26.안) 600(+13%)/400(+11%)

□ AI·빅데이터 기반 혁신 기술기업 평가(K-TOP) 확산

* (K-TOP) Korea-Technology rating Open Platform(기보 운영)



① 대국민 공개 플랫폼 구축

- 플랫폼 내 모든 평가 모델을 기업에 무료 개방하여 자가진단 결과에 따른 지원사업 선정 가능성 및 맞춤형 지원사업 정보 제공 ('26.下)
- 동 분야 우수기업군의 데이터 분석을 통한 혁신성장 경로를 제공하여 자기주도 혁신성장 기반 마련

② 지원사업 선별 환류 체계 구축

- K-TOP을 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평가점수에 점진적으로 반영하여 평가위원 중심 선정체계 탈피 ('26~ 점진적 확대)
 - * ('26년 적용) R&D 성과조사,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, 레전드 50+ 등 10개 사업
 - 지원기업의 K-TOP 지수 추적으로 우수 성과기업을 선별하고, 필요 사업을 연계 지원하여 성과베이스 기반 역량 평가 제고
- 중장기적으로 공공기관이 일일이 신청서류를 확인하여 긴 시간·인력이 소요되는 서면평가를 K-TOP으로 대체하여 선정 기간 단축

③ 민간·금융 시장과 연계 지원

- K-TOP에서 대출기업 평가 및 보증추천(은행) → 보증서 발급(기보) → 대출실행(은행)까지 가능한 원스톱 기술금융 연계 추진
 - * 우리은행 시범 도입('25.10) → 시중은행 확대 계획('26.下)
- VC의 스타트업 투자 심사에 활용 가능한 전용 평가모델 구축('25.말)

□ 지원분야별 AI 기반 심사 고도화

- (중소기업) 중진공이 정책자금 대상 선별에 활용 중인 AI 평가 모델(K-value*)을 고도화하여 중진공 재정 지원사업으로 확산('26.上)
 - * (K-value) 기업 재무·신용정보(17만건), 산업·기술 등 외부데이터(550만건) 학습으로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13개 등급으로 제공(K1 ~ K13)
- (소상공인) AI 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시스템(SCB)을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활용 방안 마련
 - * 금융위 주관 TF 운영('25.8~) → 시스템 개발('26) → 소상공인 정책자금 활용('27)
- 금융 데이터와 다양한 비금융 데이터*를 결합·활용하여 재무 능력 외 성장성·안정성 등 다양한 지표를 함께 평가
 - * (중기부 보유 데이터) 노란우산공제 납부금(여유자금), 상권분석정보(집객력·구매력), 백년가게·소공인, 혁신소상공인 등(성장성) 등

□ 빠른 심사 및 피드백 추진

- 평가 간소화, 조기 공고 등을 통해 지원기업을 신속하게(4월 內) 선정하여 (평균) 9개월 이상의 충분한 수행기간 보장 ('26.上)
 - * (대상사업) 틱스, 혁신바우처, 온라인수출지원, 예비·초기·도약 창업패키지 등 20개 (평균 사업수행기간) 8.1개월 → 9.7개월 (+1.6개월)
- 탈락기업에는 사유와 함께 사업계획서에 대한 전문가의 피드백을 제공하여 평가 절차가 기업의 자산이 되는 환경 구축 ('26.下)

<주요 기관 지원사업 탈락기업 피드백 지원 계획>

기관명	추진계획
중진공	수출, 지역, 인력 등 중진공 지원사업 탈락기업 대상으로 기업의 문의 여부와 관계없이 탈락 사유에 대한 자세한 피드백 제공 추진
소진공	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단계별 주요 탈락 사유를 포함하여 개별 문자 안내
기정원	R&D를 처음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피드백과 AI 기반 분석자료를 제공 추진
창진원	희망하는 스타트업 대상으로 평가위원의 의견을 제공하고 멘토링 진행

V. 향후계획

추진과제	추진일정
1. 「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」(가칭 '기업마당') 구축	
▪ 기업마당·중소벤처24 메뉴 재구성 및 통합플랫폼 테스트베드 구축	'25.12
▪ 통합 포털 및 AI 서비스 시범 운영	'26.下
▪ 중기부 신청채널 통합회원 관리	'26.下
▪ 통합플랫폼 정식 개시	'27.1월
▪ 타부처 신청채널 통합 로그인	'27
2. AI 기반 맞춤형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	
▪ 관세정보 제공 및 맞춤형 수출국가 추천 서비스 개시	'25.12
▪ 창업기업 「딥음지수」 서비스 개시	'26.下
▪ 상권분석 등 소상공인 「AI 도우미」 서비스 개시	'26.下
▪ AI 기반 맞춤형 지원사업 추천 및 컨설턴트 운영(중소 통합지원 플랫폼)	'27.1월
▪ 「제조AI 24」 플랫폼 개시	'30
3. 디지털화로 서류부담 감축	
▪ 행정정보공동이용·공공마이데이터 등 기업정보 연계	'25.12
▪ 신청서류 간소화를 반영한 지원사업 공고	'26.上
▪ 타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 협의	'26.上
▪ AI 기반 사업계획서 작성지원 시스템 구축	'26.下
4. 불법 브로커 등 제3자 부당개입 차단	
▪ 기관별 불법 브로커 신고체계 가동	'25.12
▪ AI-데이터 기반 불법 브로커 적발 시스템 구축	'26.上
▪ 제3자 부당개입 차단 법적 근거 마련(정책자금)	'26.上
5 시장·AI 기반 혁신기업 선별 강화	
▪ VC 전용 평가모델 구축	'25.12
▪ K-TOP, K-value 활용 지원기업 선별	'26.上
▪ K-TOP·은행권 협업 원스톱 기술금융 연계	'26.下
▪ K-TOP 대국민 공개 전환	'26.下
6. 중소기업 지원 공공기관 지원체계 개선 노력 촉진	
▪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반영	'26.1
▪ 공공기관별 AI 서비스 책임관 지정	'26.上

참고

K-TOP 개요 및 '26년 평가 적용 지원사업

□ (개요) AI 기반 평가모형을 탑재한 개방형 플랫폼으로 ▲기업의 혁신역량, ▲기술 사업성 및 ▲기술 원천성을 진단('25~, 시범운영 中)

* (명칭) 개방형 기술평가 플랫폼, K-TOP (Korea Technology-rating Open Platform)

< 신규 기술·기업평가 모델 개요 >

기술평가 모형	개요 및 입력정보	
<p>기업혁신역량지수</p>	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기업의 혁신역량과 성장가능성을 지수화하여 제공 ▶ 타기업 대비 상대적 위치정보와 분석의견 제공
<p>기술평가표준모델</p>	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기업 보유 기술의 사업성 등급 및 평가의견 제공 ▶ 신속 보증지원 및 업력 초기기업 평가에 최적화
<p>기술의원천성평가모델</p>	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특히 DB 분석을 통해 기술의 핵심성, 독창성, 파급성, 부가가치 창출을 분석 ▶ 기술의 원천성 등급과 분석 의견 제공
	입력 정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기업 정량정보 (R&D 지표 14개) ▶ 25개 내외 체크리스트 문항
	입력 정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기술 개요 → 핵심 키워드 추출하여 텍스트 유사도 기반으로 유사 특허기술 군집과 비교·분석

□ (활용) 중소기업 지원기관·금융기관은 기업 기술역량 평가자료로 활용, 개별기업은 자가진단 등으로 지원사업 참여 가능성 판단 등에 참고

* (플랫폼 제공 서비스) ①평가 입력정보 전자 연동, ②개별기업 자가진단, ③기업 집단평가, ④기업 평가정보 전송·열람 등 수요자 맞춤형 편의 서비스 제공

□ '26년 평가 적용 지원사업

'25년 시험적용					'26년 계획			
기관		지원사업		평가건수	도입방식	평가건수		도입방식
기 정 원	기술	R&D 성과조사(최근 5년)		-	-	20,000		성과분석
		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	시장대응형*	484	참고자료	글로벌선도 (수출지향형)	313	참고자료
	중소기업 유망기술 (소부장)					500		
	지역	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		850	점수반영 (70%)	900		점수반영 (70%)
		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R&D		145	참고자료	235		참고자료
		지역기업 역량강화 R&D		90	참고자료	220		참고자료
		지역특화 레전드 50+		717	참고자료	717		참고자료
		지역기업 성장사다리		711	참고자료	700		참고자료
		시군구연고산업육성		-	-	500		참고자료
	산학 연합회	지역중소기업 밸류체인		20	참고자료	120		참고자료
	기보	융자연계형 R&D(BIRD)		330	점수반영 (25%)	'26년 예산 미반영		
	합계	9개 사업 3,564건				10개 사업 24,205건		

* '26년 R&D 사업구조 개편으로 시장대응형 폐지